

#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0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이정문 · 조 국  
이기현 · 박홍배 · 이수진  
김문수 · 조계원 · 안태준  
신정훈 · 노종면 · 복기왕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
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.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.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.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.

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·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.

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

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.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1조).

##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6호 중 “위원의”를 “위원, 전문위원의”로, “아니한”을 “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5호에”를 “제1항제5호·제6호 또는 제7호에”로, “사람의”를 “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”로 한다.

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8. 제7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또는 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 개정규정 및 제13조제9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 및 제13조제9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~ 5. (생    략) 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 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<u>아니한</u> 사람	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<u>위원, 전문위원의</u> --- ----- ----- <u>아니하였거나 대통령</u> <u>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</u> <u>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</u> <u>이 경과되지 아니한</u> ----- 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 른 대통령선거에서 <u>후보자의</u> <u>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</u> <u>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</u> <u>경과되지 아니한</u> 사람 8. 제7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 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
<u>&lt;신    설&gt;</u>	
<u>&lt;신    설&gt;</u>	

<p>② <u>제1항제5호에</u>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<u>사람의</u>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② <u>제1항제5호·제6호 또는 제7호에</u>----- -----<u>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</u> 따른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<u>정무직공무원의</u>----- -----.</p>
---	---